공청회 지상중계

산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공청회 개최

① 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산을 보는 새로운 시각
② 산지이용체계재편에 따른 임지별 구분기준과 구분방법

산림청은 전국토의 65%인 산지를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면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

- 산림청은 '95. 9. 15(금), 10:00~17:00까지 경기도 광릉 수목원 시청각실에서 곽만섭(郭滿燮)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관계관, 임학계, 임업계, 언론계, 경실련, 시민단체대표 등 약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① 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② 산지이용체계 재편에 따른 임지별 구분기준 및 구분방법이란 2개 주제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제 1 주제인 『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산을 보는 새로운 시각』은 전국토의 65%인 산지를 소극적인 보전위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보전 및 이용 · 관리로 정책의 전환을 할 것인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여 최적대안을 모색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며,
- 제 2 주제인 『산지이용체계재편에 따른 임지별 구분기준과 구분방법』은 '94. 12. 22 산림법을 개정한 바 있고 '95. 6. 23 동법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산림청장은 산지이용체계를 재편, 확정고시한 후, 산지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지이용구분 기준과 구분방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적 대안을 도출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산림청이 제시한 3가지 대안을 보면,
  ① 산림의 위치와 역할 및 지역특성에 따라 대폭 재편하는 방안
  ② 가급적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물리적 기준등에 대한 모순점이 제거되도록 재편하는 방안
  ③ 지역의 특성이나 산림소유구분(국가 · 개인)에 따라 재편기준을 달리함으로써 대폭 재편안과 현행체계 유지안을 절충하는 방안등이다.

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자 : **최 민 휴** (임업연구원장)

1. 山의 形而上學 (山의 道)

山은 山이요 自然은 自然이련만, 보는 이의 視覺에 따라 그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山을 보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면, 정작 산은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일 뿐 입니다. 또 山을 보기 위해 산밖에 나오면, 산은 볼 수 있을지언정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산을 보는 人間의 눈의 限界인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겹눈과 홑눈을 함께 지닌 잠자리의 눈을 빌린다면 山의 遠景과 近景을 한목에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人間의 山일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건데, 人間이 山과 自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人類의 文明과 命運이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人類文明은 나무를 베는 도끼소리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도끼소리가 그칠 때, 그 文明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 위대했던 이집트文明, 메소포타미아文明, 黃河文明까지도 모두 멸망하여 모래속에 묻혀 버린 것은, 그들이 山을 支配하고 利用할 힘만 있었지, 이를 人間과 調和속에 더불어 살아야 하는 지혜도 없었고, 숲을 가꾸는 지식도 기술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C 現代文明의 장래는 과연 어떨는지요. 英國이 낳은 世紀的 史學者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최근 Lynn White, Jr. 교수도 같은 주장), 일찍이 이에 대해 아주 비관적인 結論을 내놓았습니다. 즉 그는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으로 이어지는 理數自然觀과 西歐의 自然支配思想은 그 뿌리가 기독교文化에 있음을 지적하고 (창세기 1장 28절), 자연지배문화가 비록 自然科學의 發達과 人類에게 物質的 풍요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문화의 퇴폐와 환경의 파괴를 불러옴으로써 주라紀의 恐龍처럼 人類와 現代文明은 몰락의 길로 치다를 수 밖에 없다고 警告한 바 있습니다.

또한 美國의 文化人類學者 프로렌스 크라크혼博士는 人間의 自然觀에 따라 自然崇拜文化, 自然支配文化, 그리고 自然調和文化로 3분류하고, 西歐 自然支配文化의 限界를 지적하고 日本의 自然調和文化의 價値를 評價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92년 4월 東京에서 열렸던 이른바 賢人會議에서도 日本은 自然保全과 경제개발의 調和로운 達成에 成功한 나라이며, 거기에는 文化的 背景이 있었다고 宣言함으로써

西歐自然支配文化의 自尊心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東京大 철학교수 梅原博士는 日本人의 자연조화사상의 文化的 배경은 다양하나 특히 佛敎사상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C 地球環境이데올로기의 실마리를 東洋의 傳統文化에서 찾으려고 西歐人들은 梅原교수에게 매달리고 있는 듯하나, 日本文化의 뿌리가 韓半島라고 생각한 사람은 적은 듯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수 많은 自然調和文化의 갈래가 용해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에니미즘 이외에도 老子의 無爲自然觀, 壯子의 無差別自然觀, 불교, 유교의 自然觀등이 모두 우리의 전통적인 자연조화사상의 要素들이라 할 수 있으나, 즉 하늘의 神 桓雄이 아들 桓因을 지상에 보내시고 桓因은 態女곧 自然과 혼인하여 檀君을 낳으시고, 檀君은 神檀樹 아래 神市를 베푸시고, 弘益人間의 善政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檀君神話야말로 自然調和思想의 始源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 어느 건국신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우리 겨레의 삶은 山에서 태어나 山에서 살다 山으로 돌아가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山을 읊으면 詩가 되고, 山을 그리면 그림이었습니다. 山을 흥얼거리면 노래요, 山에 엎데어 빌면 곧 종교입니다. 山은 나의 一部요, 나 또한 山의 一部였기에 山은 他者도 對立者도 아니요, 征復의 客體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悠久한 自然調和文化는 우리 傳統文化의 뼈대가 되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日本列島에까지 전파시켜 왔음은 歷史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地球環境과 現代文明을 살리는 自然調和文化의 元祖는 韓國이므로 밖으로는 이를 世界 環境이데올로기로 昇華시키도록 힘쓰고, 안으로는 우리 江山을 가꾸어가는 國土哲學으로 內面化해야 할 줄 압니다.

2. 山의 形而下學 (山의 器)

비록 山은 形而上學이 人類文化의 相扶相助라 할지라도, 이를 떠 받치는 것은 그 經濟的, 環境的 價値를 實現시키는 山의 形而下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地域의 表面과 山의 容積은 늘지 않는데 反하여, 人口, 所得, 知識등 山에 대한 壓力은 날로 증대되어, 그 均衡을 유지해 가는데는 지혜와 기술이 필수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獨逸 에센大 哲學교수 회슬레 (V. Hosle) 博士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체제의 特性상 모든 財貨와 서비스는 화폐가치로 變形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經濟와 技術없이는 環境을 救援할 수 없게 됩니다. 獨逸의 林學者 칼 하셀 (Karl Hasel) 博士가 200여년의 獨逸林業에 대한 實證的연구를 通하여 내리고 있는 결론은, 林業利用의 最高, 最後의 發展形態는 「林業經營 (Forstbetriebs-wirtschaft」이므로, 林業技術과 持續的인 經營을 不可缺의 要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론

자들은 흔히 山에 손을 대면 댈수록 生態系와 환경이 파괴되므로, 自然狀態로 放置할수록 좋은 환경가치를 發揮하는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立場은 現代林業技術을 理解하지 못하고 있거나 無爲自然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데서 오는 오류라고 생각됩니다.[1]

現在 先進林業技術을 動員하여 集約的 林業經營을 實行할 경우, 自然放置했을 경우에 比하여, 經濟機能이 4~5倍, 環境機能이 2~3倍 더 發揮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老子의 「無爲」 自然의 참뜻도 無行爲가 아니라 自然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음이니, 自然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行爲가 無爲自然의 본뜻이라 생각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自然調和思想이 自然과 人間의 調和를 뜻한다면, 그 實踐的 意味는 환경보전과 經濟開發의 調和를 爲하여 持續可能한 林業經營을 뜻한다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특히 私有林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個人別 自由와 公共的 規制의 調和 곧 市場經濟原理와 計劃經濟原理의 調和로 이어지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爲하여는 그 具體的 實行方案은, 모든 産地의 自然的 社會經濟的 條件이 千差萬別임을 감안할 때, 長期的인 産地利用區分體系를 確立하는 作業은 國家의 몫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山地이므로 그 效率的 利用 여부는 국민생활과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1980년대부터 국가가 나서서 山地의 利用區分을 實施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UR, GR, WTO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山林資源政策에도 크게 3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山地轉用需要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UR시대를 맞아 農地는 남아도는 반면에, 所得增加와 더불어 野外레저와 스포츠用地 및 産業用地 需要가 크게 늘고 있으므로 傾斜度와 立木度같은 物理的 轉用基準만으로는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 産地需要에 對處하는 문제가 그 첫번째 입니다.

둘째, 地球環境時代를 맞이하여 이른바 GR바람이 일면서 木材의 國際市場價格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으며, 이른바 「木材饑饉」時代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30억달라를 들여 95%의 木材를 外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木材價格이 오르고 木材饑饉이 닥칠 경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木材와 관련되는 모든 産業 建築, 家具, 펄프제지, 심지어는 책값, 신문값까지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편 木材自給率이 5%밖에 안되니 林業所得이란게 미미할 수밖에 없고 農家所得의 1% 내외에 불과합니다. 다른나라는 적어도4~40%까지 林業所得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UR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이제 農民들도 농사만 들여다 보지 않고 다양한 소득원을 찾기에 이르렀으며, 山地를 이용하여, 살길을 찾으려 해도 수 많은 規制法에 묶이어 어찌할 수 없다면서 山林財産에 대한 基本權侵害를 호소하는 農民의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이리하여 木材需給과 林業所得 향상 문제가 그 두번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環境의 核心問題라 할 물과 大氣問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물문제 하면 人工댐에만 의존하려 하는데, 올봄 가뭄때만 보더라도 산골짜기에서 내려올 물이 없는데 人工댐이 바닥을 들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문제의 量과 質을 생각할 때 長期的으로 人工댐의 限界를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벗어나 자연댐, 녹색댐이라 할 수 있는 山林의 根源的인 貯水機能을 향상시키는데 눈 돌릴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CO_2 吸收機能만 보더라도 國土의 65%를 점하는 山林資源이 化石燃料에서 배출한 CO_2의 17%만 吸收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環境水準입니다. 그 원인 또한 우리의 山林資源이 외견상 푸르게 綠化만 되어 있지 손질이 안되어 그 內實이 텅비었다는 말이 됩니다. 專門的으로 말하면 ha당 蓄積이 40㎥ 수준으로는 日本 120㎥, 獨逸 300㎥에 比較할 때, 大氣淨化機能, 炭素固定機能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됩니다.

반성하건대, 지난 수년에 걸쳐 國土綠化를 이룩한 우리는 그동안 山林資源 培養에 너무나 소홀히 해왔습니다. 특히 保全林地만 하더라도 그 管理責任者가 積極的으로 技術을 도입하고 投資를 단행하여 經濟財의 生産性을 향상시키려 하기보다는 自然狀態로 放置한채 山林資源이 오히려 황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으로 마시는 깨끗한 물, 코로 마시는 맑은 공기, 눈으로 즐기는 아름다운 景致, 이러한 山林環境財도 이제는 더 이상 공짜로 즐길수 있는 自由財가 아니요, 經濟財가 되었다는 現實이 중요합니다. 코스트를 支拂하고 땀을 흘리고 우리 모두가 關心을 가지고 持續的으로 生産해내야만 비로소 質 좋은 山林環境財, 量的으로 넉넉한 山林環境財를 즐길 수 있는 時代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限定된 山地로 볼 때,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轉用需要에 對應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木材需要, 環境需要, 野外레져 수요를 充足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林産財貨와 自然서비스 생산활동에 우리 山地의 71%인 私有林 所有者를 參與시키려면, 各種 山林環境財에 대하여 最少限의 代價를 支拂함으로써 生産動機를 부여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林業經營은 1次産業에 머무르지 않고, 2次, 3次産業의 段階로까지 擴大되지 않으면 안될 것 입니다. 山은 더 이상 木材만을 생산하는 平面的 土地 (Land) 槪念으로 볼 것이 아니라, 國民全體가 生活

하고 즐기는 立體的 空間槪念(Space)으로 볼 일 입니다. 그리하여 林業經營者들로 하여금 그들의 山을 다시 쳐다보게 하여 積極的으로 새 技術을 도입토록 하고, 投資마인드를 일깨워, 山林의 所有權에 상응하는 社會的 責務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山을 보되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自然哲學的 次元에서 山을 본 抽象的인 山林觀이요, 나중것은 實用的인 山林觀이였습니다. 多幸히 우리에게는 山과 人間을 調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傳統文化가 있고, 나무와 숲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技術이 있습니다. 21世紀의 自然調和文化를 이 땅위에 꽃피우고 東方의 등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山林觀을 바탕으로 이른바 持續可能한 林業經營으로 숲을 가꾸어가야 할 것으로 確信합니다.

제 2 주제

산지이용체계 재편에 따른 임지별 구분기준과 구분방법

발표자 : **김 영 달** (산림청 산림경영국장)

□ 산지이용체계재편의 배경

○ 현행 보전임지·준보전임지의 산지이용체계는 1980년 농지·초지 등 농업용 목적에 맞추어 구분한 것이나

– 그동안 산지이용패턴이 관광지·레져용지등으로 바뀌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또한 산지에 대한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산지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함

–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맑은 물, 깨끗한 공기등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요소가 증대됨

–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선진국들의 열대림등에 대한 벌채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목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목재자원증강대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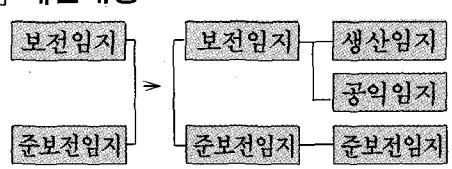
– 또한 산업발전에 필요한 토지공급기능도 중요함

□ 추진경위

○ 산림법 개정·공포 : 1994. 12. 22

○ 산림법시행령 개정·공포 : 1995. 6. 23

□ 재편내용



□ **임지별 구분방안**

○ 산지이용체계재편작업은 임지별 적정면적, 지역별 분포, 현행 구분체계와의 관계등이 고려되어야 함

○ 위와 같은 3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3가지 대안을 작성하고 대안별 구분기준·장단점등을 분석함

〈제 1 안〉 : 산림의 위치와 역할 및 지역특성에 따라 대폭 재편하는 방안

– 현행 용도구분에 구애됨이 없이 산지의 기능 및 이용목적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는 방안으로서

– 현행체계의 모순점이 해소되고 합리적인 구분이 가능하나

–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령과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

〈제 2 안〉 : 가급적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물리적 기준등에 의한 모순점이 제거되도록 재편하는 방안

– 현행 보전·준보전임지의 틀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재편하는 방안으로서

– 산지보전·이용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 현행 구분체계의 모순점 개선이 미흡함

〈제 3 안〉 : 대폭재편안과 현행체계유지안을 절충하는 방안

– 지역특성이나 산림소유구분에 따라 재편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으로서

– 산지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재편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나

–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편작업이 어려움

토론자별 토론요지

□ **1주제 : 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배병휴 매일경제 논설위원**

– 전통적으로 산은 숭배의 대상이며 삶의 터전이라고 인식하여 왔음

– 토지수요증가에 따른 산지개발은 불가피할 것이나 보전되어야 할 산지는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의 대부분이 사유림인 점을 감안 사유림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만 보전지역으로 정하되 재산권제한에 다른 보

상책등을 강구하여야 함
- 수종갱신조림은 미입목지등에 실시하고 도입수종조림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손재영 건국대 교수**

- 도시용토지의 부족은 토지가격의 상승요인이 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됨
- 따라서 보다 많은 산지를 도시적용도로 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이중에서 산업용지등을 개발토록 하여야함
- 산림의 공익적기능을 수혜받은 자들로 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산림경영·투자로 연결시켜야 할 것임
- 장기 목재수급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기초로 생산임지 면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요청됨. 농지의 경우도 식량자급을 목표로 농지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아님

○ **이경재 서울시립대 교수**

- 지구온난화방지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산림보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골프장 등 대규모 레져시설은 산림파괴의 주요원인이나 주민소득과는 연관되지 않으므로 산촌소득과 연계한 소규모 레져시설 위주의 생태관광개발이 바람직 함
- 수종갱신 등 집약적 경영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이광원 농경연 연구위원**

- 산을 보는 시각과 인식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수요와 기술수준에 따라 달라져 왔음
- 산지는 국가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으로서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방안이 됨
- 국민 모두의 산지자원을 다양한 수요에 알맞게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이용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최 열 환경연 사무총장**

- 비젼이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임. 따라서 21세기 비젼으로 산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지금까지는 목재가격 하락으로 벌채해야 경제성이 없지만 현재 레져개발은 이익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국민소득 1만불이 되면 관광레져로 관심이 바뀌게 되지만 현재 레져개발은 이익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산을 보호·보전하는 바탕하에 이용·개발하여야 하며 스위스와 오지리가 좋은 예임
- 국립공원과 같은 보전지역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환경용량에 맞게 개발하여야 함

○ **최병선 경원대 교수**

- 현재 4.4%인 도시적 용도의 토지는 2배 정도인 7%선 까지는 개발되어야 함

- 선진국은 60-70년대에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정지시기인 2020년까지는 개발이 불가피할 것임
- 문제는 어느 부분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국토정밀조사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함
- 산지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정밀산지이용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는 환경보전보다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국민이 기꺼이 돈을 지불해야 환경도 보전하고 산림도 관리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산림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은 국민이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산림세 또는 특별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봄

○ 최종천 강원대 교수

- 『산=나무=임업』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발전의 흐름속에서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함
- 우리 임업을 재취임업으로 보고 임업인을 산림의 약탈과 환경의 파괴자로 보는 시각이 있음
- 우리 국민들은 산악국가에 살면서도 산은 보전을 하고 평지는 개발하여야 한다는 평지국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전국토의 65%인 산지를 제외하고 국토계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산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국토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방청석 토론

○ 이능선 임우회원

- 그린벨트등 보전지역은 국유지화 하여야 하며 사유림에 대한 재산권제한은 억제되어야 함
- 수종별 소득전망등 연구자료를 제시·홍보하면 산지조림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봄

○ 전재인 환경부 직원

- 한국은 생물다양성보전이 위기상태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데도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산림수종은 양보다는 질위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수종갱신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김수완 (전 임협지도이사)

- 국립공원등 법정 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목재생산을 위한 수종갱신 등 인공조림은 불가피한 실정임
- 인공림 조성이 생태계파괴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수원함양기능등은 오히려 증가되므로 수종갱신 작업을 환경파괴행위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시각임

○ 이규현 모범독림가

– 국가(영림서)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을 독림가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

○ **임경빈 교수**

– 산을 보는 두가지 시각 즉 형이상학적시각과 형이하학적시각을 함께 보는 시각도 가능하다고 보며, 따라서 보전과 개발의 조화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외국에 비하여 산림율이 높다고 하여 개발가능산지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는 없은 것임
– 산을 경외하는 동양적사고는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산을 보전하면서 이용하는 지혜를 찾아야 함

□ 2주제 : 산지이용체계 재편에 따른 임지별 구분기준과 구분방법

○ **민병택 문화일보 논설위원**

– 자연질서를 인공적으로 재편하는 것은 후대의 재해발생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산지를 개발하여 가용토지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임목의 생육에 부적합한 산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사유림이 보전지역으로 묶이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에서 매수하여야 하며, 보전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음

○ **오진모 강원개발원장**

– 산지이용체계 재편은 문화성, 미래성, 공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보전과 개발가능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산지이용구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시·도별, 지목별, 소유별등 종합적인 산지관리정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하고 보전대상임지를 공익임지로 구획하는 것은 바람직함
– 강원도의 경우 산림율이 82%이며 이중 75%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므로 산지이용체계 재편시 개발가능지를 넓혀 주어야 할 것임
– 특히 강원도 산림의 60%가 국·공유림이므로 전용기준 등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김은식 국민대 교수**

– 산림문제와 환경문제는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로 보아야 함
– 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하고, 국유림과 사유림의 구분기준을 차별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봄
– 개발가능한 준보전임지의 면적규모와 국·사유림의 구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핵심적인 일임

- 공익임지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매수하여 현재 21%인 국유림의 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임
- 생산임지도 공익기능을 발휘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지정된 보전지역 이외에는 생산임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공익임지는 가급적 국유림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제 3안이 바람직하다고 봄

○ **정주상 서울대 교수**

- 지난 3월 공청회때 발표된 내용에 비하여 그 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매우 세련된 안으로 정리되었음
- 특히 산림자원관리지침(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 들여 짐
- 그러나 임지별 구분기준을 만들려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므로 세부적인 기초조사가 필요할 것임
- 사유림이 보전지역으로 묶이는 경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산림목적세 등의 신설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함
- 오늘 제시된 대안중 절충형인 3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생각됨

○ **유명근 한솔포렘이사**

- 일제시대에는 수탈목적으로 벌목되었고 해방이후에는 국토녹화를 위한 치산정책추진으로 산지는 정부의 목적과 의지대로 지정·관리되어 왔음
- 그 결과 일제시대 이후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바로 산림소유자라고 할 수 있음
-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30조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산주에게 혜택이 돌아 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
- 따라서 이번 산지이용체계 재편에서는 산림소유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되기 바람

○ **박양호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계획은 100년대계로서 적어도 3세대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함
- 경쟁력있는 개방적국토체계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등을 위하여 산지이용체계 재편은 꼭 필요하다고 봄
- 산지와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산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개방적국토체계를 구축하는 길임
- 2030년까지 5,000㎢의 토지가 필요하며 이중 2,000㎢는 산지를 개발하여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산지이용계획이 국토이용계획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소홀히한 측면이 있음
- 산림안에 주택과 공장이 공존하는 국토공간조성이 필요하며 모범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 배울 필요가 있음
- 이번 공청회자료는 잘 정리 되었음. 특히 국토계획과의 연계, 지자체 의견수렴, 지역별로 특색있는 개발을 도모코자 한 것은 획기적인 발전으로 봄

- 이번에 제시한 대안 중
  1안은 시간적인 제약, 기준제시의 곤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3안은 1, 2안의 절충안이나 시·군을 개발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2안을 좀 변형하여 국토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재편하되 개발촉진지역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이진아 경실련 사무국장**

- ESSD개념을 오해하여 지금까지 보전한 산림을 개발하자는 도구로 사용할 우려가 있음
- 수종갱신은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므로 억제되어야 하며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함
- 개발위주의 산지정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보전지역으로 묶인 사유림에 대한 보상규정이 제시되어야 함
- 이번에 제시된 재편안 중에는 2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봄

○ **김의경 경상대교수**

-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익임지와 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산임지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유럽의 경우 생물다양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국산림은 목재생산기능위주로 관리하고 있음
- 합리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면 공익기능도 증진되는 것이므로 생산임지에서도 공익임지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임
- 제시된 대안을 일부 변경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만을 공익임지 또는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산임지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

방청석 토론

○ **정태선 임업후계자회장**

- 산주의 이익에 반하는 산지이용체계재편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유림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할 것임
-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다 많은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유택규 원광대 교수**

- 개발수요를 추정한 후 개발용도 산림을 구분하여야 할 것임
- 임업용인 생산임지는 250-300만 ha 정도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이용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 함
- 오늘 토의된 산림목적세등은 꼭 관철되도록 임업인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맹지연 환경련 간사**

- 골프장, 스키장등 대규모 레져시설과 수종갱신으로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므로 개발위주의 산지이용구분은 재고되어야 함

– 국립공원내 국유림까지 골프장과 스키장을 개발토록 허가하는 것은 환경파괴의 대표적인 사례임

○ **이덕규 단양군산림과장**

– 오늘 제시된 대안중에서는 산주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3안을 지지함. 앞으로 산림정책은 산주와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 수종갱신작업이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수종갱신을 환경파괴로 보아서는 안됨

○ **이춘승 연천군산림과장**

– 산림정책은 지금까지 보전위주로 추진되었고, 과다한 벌채규제와 단속으로 산주들로 부터 원성을 들으면서도 산림을 보전하여 왔는데도 산림정책을 개발위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임

– 산지 이용체계재편시에는 임지구분에 따른 기초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구분작업이 이루어 져야 함

내 몫은 내게 다오

○ 내 산밑에 땜 막아 물고이게 해놓고
물세(水稅)는 받아가며 고마운줄 몰라하네
물(水) 주인 누구인지 알아나 주려므나
– 水源涵養 保安林

○ 내산 내가 가꾸워 푸른숲 이룩되니
국립공원 지정하여 입장료 받아가네
당신이 淸人이면 나는 곰이련가
– 國立公園으로 編入된 私有林

○ 내산 내가 가꾸어 푸른숲 우거지니
꿩, 토끼, 노루, 멧돼지 뛰노려는데
수렵허가 웬말이냐, 눈뜨고 도둑맞네.
– 수렵장 허가